

“한반도 남북평화협력시대 대비 경기북부 지역 전략사업 추진해야”

경기연구원 보고서 발표

한강하구 남북공동 활용 통일경제특구 유치 등 제안

남북평화협력시대에 대비해 경기 북부 지역에 통일경제특구 유치 등의 전략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1일 남북교류협력에 따른 경기도 차원의 상황별 대응 전략과 주요 전략 사업을 제안한 ‘남북평화협력시대와 경기도의 역할’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종전 선언, 평화협정 체결, 평화체계 구축 등이 이뤄질 경우 한반도는 남북평화협력시대로 전환되고 경기북부는 지정학적 특성상 남북협력의 전진기지가 돼 한반도의 중심지로 재도약할 것”이라며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긴장 완화·경기 서북부지역개발 활성화 등이 기대되며 특히 경기북부지역이 최대 수혜지가 될 것”이

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지속 번영과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서는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남북평화협력시대에 대비한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남북평화협력시대에 대비한 경기도의 주요 전략사업으로 통일경제특구 유치 및 한반도 국제협력지대 추진, 한반도 통합에 대비한 경기북부 ‘신 종합발전구상’ 수립,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컨트롤타워 및 플랫폼 구축, 한강하구 남북공동 활용, 임진강수계 공동 관리, 남북 농업협력시스템 구축 및 북한 지역개발 참여 등을 제안했다. 또 접경지역 공동 방역·방제 강화, 비무장지대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 조성, 북한 내 ‘옛 경기도’ 지역과의 교류협력 강화, 남북 사회문화 및 인적교류 확대, 경기북부 남북연결 철도·도로망 강화와 경원선 복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남북경제협력사업 참여 등을 경기도의 역할로 제시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경기, 남북평화시대 대비 전략사업 구상을”

경기연구원 ‘역할 보고서’ 발표 지정학적 특성상 전진기지 전망 북부 ‘신종합발전구상’ 등 제안

의정부=송동근 기자 sdk@segye.com

남북평화협력시대에 대비해 경기도 차원의 상황별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통일경제특구 유치 등 주요 전략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1일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경과를 바탕으로 상황별 대응전략을 제안한 ‘남북평화협력시대와 경기도의 역할’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4월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발표됐으며, 5월 ‘제4

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바 있다.

보고서는 북한의 비핵화와 종전 선언, 평화협정 체결 등이 이뤄질 경우 한반도는 남북평화협력시대로 전환될 것이며, 특히 경기북부는 지정학적 특성상 남북협력의 전진기지로 지역발전과 한반도의 중심지로서 재도약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판문점 선언으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긴장 완화와 서북부지역개발의 활성화 등이 기대되며, 무엇보다 경기북부지역이 최대 수혜지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동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반도 평화통일은 경기도의 지속 번영의 기회인 만큼 경기도정을 중심으로 남북평화협력시대에 대비한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요 전략사업으로는 경기북부 ‘신종합발전구상’ 수립, 남북교류협력 컨트롤 타워 및 플랫폼 구축, 통일경제특구 유치 및 한반도 국제협력지대 추진, 경기북부 남북연결 철도·도로망 강화와 경원선 복원, 임진강수계 공동 관리, 접경지역 공동 방역·방제 강화, 비무장지대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 조성, 남북 사회문화 및 인적교류 확대 등을 꼽았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남북평화협력시대의 최대 수혜지가 될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통일경제특구 등 인프라를 구상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을 선도해 온 선발대로서, 중앙정부와 파트너십을 형성해 남북교류협력정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평화시대, 경기북부 발전 기회로”

경기연구원 ‘통일경제특구 유치’ 등 道전략사업 제시

남북평화협력시대에 대비한 경기도 차원의 상황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경기북부 ‘신 종합발전구상’, ‘통일경제특구 유치’ 등 주요 전략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남북평화협력시대와 경기도의 역할’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기북부가 미래 통일 한반도의 중심적 위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수도권권의 변두리 또는 남북경협 신개발 루트에서 소외된 지역이 될 수 있다는 게 이 보고서의 핵심이다. 보고서는 우선 남북 분단을 전제로 ‘접경지역’의 발전을 구상한 기존 지역개발계획 대신 ‘통일시대 중핵지대’라는 비전 아래 경기북부의 신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도지사의 직접 지휘를 받는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기반 조성 기획단’ 설치를 제안했다.

경기도의 주요 전략사업으로는 한반도 통합에 대비한 경기 북부 ‘신 종합발전구상’ 수립,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컨트롤타워 및 플랫폼 구축, 한강하구 남북공동 활용, 임진강수계 공동 관리, 통일경제특구 유치 및 한반도 국제협력지대 추진, 남북 농업협력시스템 구축 및 북한 지역개발 참여 등을 제시했다.

또 접경지역 공동 방역·방제 강화, 비무장지대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 조성, 경기북부 남북연결 철도·도로망 강화와 경원선 복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남북경제협력사업 참여를 제안했다.

김동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반도 평화통일은 경기도의 지속 번영과 경기 북부 발전의 기회인 만큼, 경기도정을 중심으로 남북평화협력시대에 대비한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종열기자

경기일보

2018년 7월 2일 월요일 002면 종합

한반도 ‘평화협력시대’ 급물살 경기도 차원 전략사업 급선무

경기研, 자칫 단순 ‘통과지역’ 전략 우려 물자·인력 ‘新중심’ 12대 전략사업 제시

남북평화협력시대 속에서 경기도 차원의 전략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적극적인 움직임이 없으면 도가 ‘기회의 땅’이 아니라 단순한 ‘통과 지역’에 머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경기연구원은 1일 ‘남북평화협력시대와 경기도의 역할’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인한 평화시대 분위기가 조성, 접경지역인 경기북부가 기회의 땅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도 차원의 적극적인 전략 사업이 없을 경우 한국과 국제사회의 투자가 북한지역에만 집중돼 경기북부는 경원선, 경의선 등 철도와 도로가 지나가는 단순 통과 지역으로 전략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원은 경기북부가 통일 한반도에서 서울과 평양을 잇는 핵심 연결지대이자 물자와 인력이

몰려드는 ‘신 중심(New Center)’이 되기 위한 12대 전략사업을 제시했다.

전략사업으로는 ▲한반도 통합에 대비한 경기북부 ‘신 종합발전구상’ 수립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컨트롤 타워 및 플랫폼 구축 ▲한강하구 남북공동 활용 ▲임진강수계 공동 관리 ▲통일경제특구 유치 및 한반도 국제협력지대 추진 ▲남북 농업협력시스템 구축 및 북한 지역개발 참여 등이다. 또 ▲접경지역 공동 방역·방제 강화 ▲비무장지대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 조성 ▲북한 내 ‘옛 경기도’ 지역과 교류협력 강화 ▲남북 사회문화 및 인적교류 확대 ▲경기북부 남북연결 철도·도로망 강화와 경원선 복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남북경제협력사업 참여 등이 전략사업에 포함됐다.

연구를 주도한 김동성 선임연구위원은 “한반도 평화통일은 경기도의 지속 번영과 경기북부 발전의 기회인 만큼 도정을 중심으로 평화협력시대에 대비한 전략을 구상하고 수혜지를 중심으로 통일경제특구, 국제협력지대 등 인프라를 구상·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승구기자

남북평화시대 ‘기회의 땅’ 경기북부... “道 차원 대응 필요”

경기연, 12가지 전략사업 제시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평화협력 확대가 기대되는 가운데, 경기도 차원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경기북부 주요 전략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경기연구원은 남북교류협력 추진 경과를 살펴보고 남북교류협력에 따른 경기도 상황별 대응 전략과 주요 전략사업을 제안한 ‘남북평화협력시대와 경기도의 역할’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4월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남북 정상이 공동 서명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발표됐으며, 5월 제4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완전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바 있다.

경기연이 제안한 경기북부 12대 전략사업

- ☑경기북부 신 종합발전구상 수립
- ☑남북교류협력 컨트롤타워 및 플랫폼 구축
- ☑한강하구 남북공동 활용
- ☑임진강수계 공동 관리
- ☑통일경제특구 유치 및 한반도 국제협력지대 추진
- ☑남북 농업협력시스템 구축 및 북한 지역개발 참여
- ☑접경지역 공동 방역·방제 강화
- ☑비무장지대 생태평화안보 관광지 조성
- ☑북한 내 옛 경기도 지역과 교류협력 강화
- ☑남북 사회문화 및 인적교류 확대
- ☑경기북부 남북연결 철도·도로망 강화, 경원선 복원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남북경제협력사업 참여

김동성 경기연 선임연구위원은 “한반도 평화통일은 경기도 지속 번영과 경기북부 발전의 기회인 만큼, 경기도정을 중심으로 남북평화협력시대에 대비한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위해서는 ▶중단 및 대기 ▶재기 및 활성화 ▶확대 및

성장 등 남북교류협력 상황별 대응전략을 수립, 협력사업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요 전략사업으로는 ▶한반도 통합에 대비한 경기북부 신(新) 종합발전구상 수립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컨트롤타워 및 플랫폼 구축 ▶한강하구 남북공동 활용 ▶통일경제특구 유치 및 한반도 국제협력지대 추진 ▶경기북부 남북연결 철도·도로망 강화와 경원선 복원 등 12가지를 제시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남북평화협력시대 최대 수혜자가 될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통일경제특구, 국제협력지대 등 인프라를 구상·설계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을 선도해 온 선발대로서 중앙정부와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정인기자

경기신문

“도북부, 통일 한반도 인력·투자 新중심”

경기연구 ‘남북평화협력시대와 경기도의 역할’ 보고서

남북평화협력시대를 맞아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전략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일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경과를 살펴보고 상황별 대응 전략사업을 제안한 ‘남북평화협력시대와 경기도의 역할’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비핵화·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 등이 이뤄질 경우 한반도는 남북평화협력시대로 전환될 것이며, 경기북부는 지정학적 특성상 남북협력의 전진기지로 지역발전과 한반도의 중심지로서 재도약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판문점 선언으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긴장 완화와 서북부지역개발의

지정학적 특성상 경험 전진기지 남북 긴장 완화 맨 최대 수혜지

北 투자 본격 맨 ‘소외’ 우려도

통일경제특구 등 12대 전략 제시

활성화 등이 기대되며, 특히 경기북부지역이 최대 수혜지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남북평화협력시대가 본격화할 경우 한국과 국제사회의 투자가 북한지역에 집중돼 경기북부는 경원선, 경의선

등 철도와 도로가 지나는 단순 통과지역으로 전략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북부가 미래 통일 한반도의 중심적 위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수도권 권의 변두리 또는 남북경협 신개발 루트에서 소외된 지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연구원은 이에 따라 경기북부가 통일 한반도에서 서울과 평양을 잇는 핵심연결지대이자 물자와 인력이 몰려드는 ‘신 중심(New Center)’이 되기 위한 12대 전략사업을 제시했다.

주요 전략사업으로 ▲경기북부 ‘신 종합발전구상’ 수립 ▲남북교류협력 컨트롤타워 및 플랫폼 구축 ▲한강하구 남북공동 활용 ▲임진강수계 공동 관리 ▲통일경제특구 유치 및 한반도 국제협력지대 추진 ▲남북 농업협력시스템 구축 및

북한 지역개발 참여 ▲접경지역 공동 방역·방제 강화 ▲비무장지대 생태평화안보 관광지 조성 ▲북한 내 ‘옛 경기도’ 지역과 교류협력 강화 ▲남북 사회문화 및 인적교류 확대 ▲경기북부 남북연결 철도·도로망 강화와 경원선 복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남북경제협력사업 참여를 제안했다.

경기연구원 김동성 선임연구위원은 “남북평화협력시대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통일경제특구 등 인프라를 구상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을 선도해 온 선발대로서, 중앙정부와 파트너십을 형성해 남북교류협력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규원·최준석기자 ykw@

도북부, 남북협력 중심지로 키울까

경기연구원 “단순 통과지역 될 수 있어”

통일기획단·협의체 등 12대 전략 제시

최근 남북평화협력 분위기에 맞춰 경기도가 ‘패싱지역’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일 ‘남북평화협력시대와 경기도의 역할’ 보고서를 통해 남북평화협력시대가 본격화될 경우, 한국과 국제사회의 투자가 북한지역에 집중되면서 경기북부가 경의선과 경원선 등의 철도와 남북간 도로가 지나가는 단순 ‘통과지역’으로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북부가 남북경제협력의 중심

으로 부상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변두리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연구원은 경기북부가 남북협력의 전진기지이자 한반도의 중심지로 재도약하기 위한 12대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남북분단과 ‘접경지역’을 전제로 구상한 경기북부 지역개발계획을 ‘한반도 통일시대의 중핵지대’라는 비전아래 ‘신 종합발전구상’ 수립을 주문했다. 도지사의 직접 지휘를 받는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기반 조성 기획단’과 ‘경기도 남북교류협의

체’, ‘접경지역 남북교류 광역협의체’, ‘경기도 통일연구소’ 등의 설치도 방안으로 내놨다.

한강하구에 남북 공동으로 ‘평화의 뱃길’을 개통하고 하구 습지 공원 조성, 옛포구 복원 및 연결 등 한강하구 개발 방안과 남북을 흐르는 임진강의 공동관리 시스템 구축도 수립과제로 꼽았다.

이외에도 ▲통일경제특구 유치 및 한반도 국제협력지대 추진 ▲남북 농업협력시스템 구축 및 북한 지역개발 참여 ▲접경지역 공동 방역·방재 강화 ▲비무장지대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 조성 ▲북한 내 ‘옛 경기도’ 지역과 교류협력 강화 ▲남북 사회문화 및 인적 교류 확대 ▲경기북부 남북연결 철도·도로망 강화와 경원선 복원 ▲서해평

화협력특별지대 남북경제협력사업 참여 등의 주요전략을 담았다.

또한 중앙정부가 외교·정치적 부담을 느끼거나 실험적 검토가 필요한 사업을 협의 하에 도가 먼저 실시하는 방안도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동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북평화협력시대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통일경제특구, 국제협력지대 등 인프라를 구성·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히, 경기도는 2000년대 이후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을 선도해 온 선발대로서, 중앙정부와 파트너십을 형성해 중앙정부의 남북교류협력정책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래 기자 jcomet@incheonilbo.com